



담뱃값인상, 복지부 예산마련을 위한 것인가

국
회
의
정
안
에
따
라
는
담
뱃
세
인
상
은
국
민
의
건강증진기금의
예산마련을
위한
일종의
특별부담금
으로
예
를
들
면
경
우
자
동
차
에
부
과
되
는
환
경
개
선
부
담
금
처
럼
일
반
조
세
에
비
해
특
별
하
고
정
당
한
이
유
가
있
을
때
그
이
유
와
특
별
한
관
계
가
있
는
자
에
게
부
과
된
다
다
만
이
렇
게
인
상
되
는
특
별
부
담
금
은
국
민
의
조
세
저
항
에
쉽
게
노
출
되
므
로
특
별
부
담
금
의
본
래
취
지
인
공
익
사
업
의
성
격
을
명
확
히
규
정
하
고
사
업
의
내
용
및
비
전
등
을
납
부
자
가
충
분
히
알
수
있
도
록
해
주
는
것
이
필
요
하
다

머잖아 담뱃값이 오를 전망이다. 담뱃값을 인상하면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율을 낮출 수 있으며, 담뱃세 인상으로 확보한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여 금연사업은 물론,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암 검진 지원 사업,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담뱃값이 오름에 따라 늘어나는 건강증진기금의 용도에 대한 논란이 매우 뜨겁다. 건강증진기금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사업의 재정 마련을 위한 일종의 특별부담금으로, 예를 들면 경우 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 개선 부담금처럼, 일반 조세에 비해 특별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이유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이렇게 인상되는 특별부담금은 국민의 조세저항에 쉽게 노출되므로 특별부담금의 본래 취지인 공익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의 내용 및 비전 등을 납부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삭감하고 ‘혈액안전관리’ 등 건강증진과 무관한 사업의 예산을 담뱃값 인상기금으로 지원

2005년도 정부의 예산안은 올해보다 9.9% 증가한 132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중 보건복지부는 2004년 예산에 비해 5.1% 증가한 9조 6,753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2005년도 예산은 향후 이번 달 20일경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된 뒤,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05년도 정부 예산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기금」이 약 1조원가량 증가하게 되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2005년도 보건복지 예산의 특징

산은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담뱃값 인상과 건강증진기금 확대를 전제로 보건복지 예산이 세워졌다

올해 10월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는 것은 최근 분위기로 볼 때 기정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올해 10월 담뱃값이 인상되고 이에 따라 건강증진기금이 확대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확실해지는 사항이다. 이처럼 아직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뱃값 인상과 건강증진기금 확대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만일 담뱃값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2005년 보건복지 예

2. 건강보험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을 현재 지역급여비의 10%에서 15%로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하여 지역 가입자 급여비 규모의 40%를 국고에서, 10%를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고부담 비율을 현행 40%에서 35%로, 건강증진기금 부담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부담을 줄이고 담뱃값 인상으로 만들어진 건강증진기금으로 대신하겠다는 의도이다.(표1)

(표 1) 건강보험 국고 및 담뱃세 부담률

구 분	현 행(A)	정부 개정 방향(B)	차 액(B-A)
국고부담률	40%	35%	5% 포인트 감소
담뱃세 부담률	10%	15%	5% 포인트 증가
담뱃세 지원액	7천여 억원	1조 1천여 억원	약 4천억 원



지난 9월 17일 기획예산처앞에서 의료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3. 건강증진기금 확대 1조원 중 5천억원이 정부 예산으로 흘러들어간다

건강증진기금이 1조원 이상 크게 확장되자 정부는 과거 일반예산으로 집행되던 사업을 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대폭 이전시켰다. 그 규모는 모두 912억원에 해당된다. 그런데 만일 건강보험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의 지원 비율을 변경하여 국고 부담 대신 건강증진기금의 부담이 더 늘어난다면 추가로 약 3,848억원이 추가 지출된다. 이는 결국 담뱃값을 인상하여 정부 예산 대신 사용되는 돈이 약 5천억원이 되는 셈이다.

더욱이 이처럼 일반예산으로 하던 사업이 기금 사업으로 전환된 것 중에는 '혈액안전관리체계 구축', '특수의료장비평가관리', '장기이식정보화사업' 등과 같이 건강증진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정부의 일반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의 담뱃값을 이용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4.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다

한편 건강증진기금이 확대되었으나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예산은 대부분 삭감되었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도시 보건지소 설립과 지역거점병원 설립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 2004년에 이어 2005년도에도 공공보건의료 사업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져 있다. 공공병원들이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예산도 모두 삭감되었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일반예산으로 하던 사업을 기금예산으로 넘기면서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관련한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보건복지 예산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점에서 우리는 지금 정부가 세워놓은 "2005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이러한 "2005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심의를 전면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담뱃값을 일반예산 대신 이용하려는 의도를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 확대,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방향에서 2005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을 다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의농연**